



5면

분동 42년 만에 통합 금암동 새출발

2025년 3월 11일 화요일 (음 2월 12일) 제369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 경 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전주시, 완주·전주 통합 첫 ‘상생발전 비전’ 제시… 행정·문화·정주여건 개선 등 균형발전 도모

전주시가 완주·전주의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효율적인 통합시 운영을 위해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 지역에 건립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을 완주군 시설관리공단과 통합·이전하고, 전주문화재단을 비롯한 6개 출연기관을 완주 지역으로 함께 이전하고 집적화해 통합시 행정을 이끌어갈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첫 번째 ‘상생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구조 전환, 수도권 양극화 심화 현상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대응, 100만 광역도시 성장을 위해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해 온 전주시가 두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의 완주지역 건립 및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통해 양 시·군의 행정과 문화,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효율적인 기관 재배치를 통해 행정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편의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기회로 삼기로 했다.

특히 시는 향후 통합에 따른 특례시 지정을 달성해 도지사의 권한을 이양받아 자체적으로 더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통합 이후 시청의 기능을 구청으로 적극 분배해 행정복합타운 외 지역에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행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에 발표된 첫 번째 상생발전 비전에 대해 내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함과 동시에 관계자들을 비롯한 지역의 여론을 살피고, 전주시의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향후 추진계획을 더욱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양 완주·전주 시군 협의회와 전주시의회, 전북특별자치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 등이 10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첫 번째 ‘상생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도, 전주시민, 완주군민과 함께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 완주·전주 통합 염원을 담은 ‘상생발전 비전’을 분야별로 발표해 통합을 위한 공감대와 담론을 모아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두 번째 상생발전 비전으로 조만간 완주·전주의 혁신적인 시간전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간 민간 주도로 시작된 통합 절차를 존중하며,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양 시군이 함께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힘써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지난 2022년 ‘상관저지지 힐링공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최초의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등 총 13차에 걸친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총 7,000억원 규모의 28개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하며 완주군민과 전주시민 모두의 미래 꿈을 키우는 공동의 터전을 다져왔다. 또, 장사시설과 버스

이용, 폐기물 처리 등의 생활 서비스와 노인복지관·도서관 이용 등의 복지혜택까지 양 시군 주민들이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차별받지 않고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에 시는 완주군민협의회의 제안한 12개 분야 107건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전주시민협의회의를 통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박진상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 위원장은 “완주·전주 통합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넘어서 전북의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자, 두 지역의 특성상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아가야 하는 미래 전략”이라며 “완주군민과 전주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모두가 더 나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완주·전주 상생발전 해결책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서도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협조해나갈 것”이라며 “완주와 전주 주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상생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통합은 지방소멸의 위기 앞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며 “이는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이며, 완주가 오히려 전주의 중심이 되고 전주도 함께 발전하며 전북이 진정한 특별한 자치도로 거듭날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 시장은 “미래세대에 물려줄 완주·전주의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을 위해 과감히 직면하고, 담대히 도전하며 대통합을 위해 당당히 나아가겠다”면서 “완주·전주를 가로지르는 만경강의 기적이,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함께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을 믿으며,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적극적인 연대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외국인 유입 지방소멸 대응

전북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확대하는 등 외국인 정착 지원책을 강화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외국인 인구를 유치해 경제와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다. 특히, 2022년 김관영 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인구 10% 범위 내 비자 추천 권한을 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운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익산시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당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을 기존 최대 2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모든 업종에서 외국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인재 유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지사 추천을 통해 외국인이 장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번 정책을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유입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숙련기능인력(E-7-4) △지역특화 외국인직업포

(F-4-R) 등 4가지 유형이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는 유학생(D-2, D-10)과 전문인력(E-7)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인구감소 지역에서 거주·취업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업별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이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인력(E-7-4R)’은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하며, 도내 인구감소 지역 10개 시군과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익산시까지 시행된다.

‘숙련 기능인력(E-7-4)’은 전북 도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E-9, E-10, H-2)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한국어 요건이 완화된 비자 발급 후 2년 내에 충족하면 되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지역특화 외국인직업포(F-4-R)’는 외국 국적 동포 및 그 가족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발급된다.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업종 제한도 완화된다. 가족 단위의 정착을 유도해 지역 사회 내 생생 인구를 늘리는 것이 핵심 목표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정착 지원 정책을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국인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5월 30일까지 봄철 화재안전전조사

대형 공사장 등 408곳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봄철을 맞아 화재 취약 대상 408개소에 대해 화재안전전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봄철 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대형 공사장 40개소를 시작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 121개소, 기숙사 15개소, 전통사찰 등 국가유산 144개소,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 대상 8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형 공사현장의 임시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화재 취약 대상의 피난·방화시설 폐쇄 및 장애물 적치 여부 △관계인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적정성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 실태 등이다.

특히 전통사찰과 대형 공사현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 점검을 추진한다. /이만호 기자

이제 임실 2025 임실 방문의해 Visit Imsil year

임실N치즈축제



옥정호 전경



옥정호 출렁다리



임실산타축제

